

# “차별화된 금융도시 만들어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혁신도시 발전과제 토론회서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모델 제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전북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주대학교 정희준 교수와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가 발제하고, 송실대 은기운 교수 등 금융전문가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전북도청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전북혁신도시 금융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 구축 토론회가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희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산, 사람, 정보와 기술이 융합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 혁신도시에 650조원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부펀드 등 자산이 모여지고(Floating) 국내·외 금융전문 인력이 공존하며 정보와 기술, 경험 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금융도시를 만들어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고착된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성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수탁자산 1·2위인 행안부 SSBT와 ENY MELON의 전수사 무소 유치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민연금기금 제2사육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착공, 전북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추면 국내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인들이 꿈과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실험하며, 지역에 머무르면서 모험과 도전 을 펼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생활인프라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송희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전북혁신도시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말하면서, "제3금융 중심지 전북 지정에 통해 전북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균형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김진성 기자

## 익산시 강소기업들, 지역 재투자 '활발'

익산시에 위치한 강소기업들의 지역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20일 익산시는 ㈜위델소재, ㈜디아아이티엔지와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위델소재는 유기소재 개발과 초고속도 정제 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업체로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비롯해 1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익산제3일

반산업단지 1만436㎡부지에 120억원을 투자해 OLED소재와 계면활성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업체는 사업 확장을 위해 9990㎡부지에 60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에 나선다.

이 공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공정재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디아아이티엔지는 공조설비, 특수컨테이너,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다.

업체는 지난 2015년 제3일반산업단지 9900㎡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해 공조설비가 완비된 ESS용 특수컨테이너를 생산하고 있다. 업체는 2334㎡ 부지에 1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를 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선도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북도,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위해 가뭄대책사업비 집중 투자

전북도는 가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총 1,197억원을 투입하여 8개 사업 373지구에 대한 가뭄대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저수율은 88.6%로 평년 76.4% 대비 12.2%가 높아 현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나, 금년 2월 15일까지 강수량이 29.8㎜로 평년 대비 57.2% 수준에 그쳐 앞으로도 강수가 적을 경우 발작물,

전수답에 가뭄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가뭄대책사업비 1,1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삼승 가뭄발생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를 위해 408억원을 투입, 토사 퇴적이 많은 저수지 준설 및 가뭄취약지역 관정개발 등을 위해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저수지 및 농업기반시설물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732억원을 투입, 농업용수 확보에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가뭄대책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281명 즉시 업무배제

친인척 특혜 등 36건 수사의뢰  
중대 과실 146건 징계·문책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다.

### ◇부정청탁 등 의혹 36건 수사의뢰... 과실 146건 징계

정부는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기로 했다.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징계요구 12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수사의뢰 6건·징계요

구 18건)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는 2452건을 적발했다.

### ◇임직원 288명 직무 정지...부정합격 13명도 업무 배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의 문책대상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임원이 아닌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잠정 13명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는 피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채용단계에 채용시 기회가 주어진다. 가령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응시 기회를 받는 방식이다.

### ◇비리자 징계감경 금지, 전수조사 정례화... 비리 근절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일회성 적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고, 채용절차 기준을 기존의 매뉴얼이 아닌 기관 내 사규로 구체화해 규범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곳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채용 전형 과정에서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채용정보를 외부에 공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부당한 채용청탁·압력을 방지코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독립된 조국의 소중함 다시 일깨운다

전북도,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준비 만반  
전야음악회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전시·공연 마련

전북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대형태극기를 분청에 게첨하고, 2월 28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100주년 3·1절 전야 음악회 '국가 관현악, 어머니는 기다린다!'를 통해 100주년 기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참여한 후손들이 100년 전 조국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동학운동과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극단 이유의 기획연극 '마지막 봄'

공연과, 공연장 안팎으로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를 비롯한 부대공연도 알차게 준비했다.

특히, 우리지역 동학운동과 항일 독립운동 사진을 전시하여,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3·1만세운동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당시 독립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념식 후에는 전주 꽃심소리 중창단 '악동지지배배'의 국악동요를 필두로 전라북도 대표 비보이 그룹의 비보이 댄스, 전라북도 연합 청소년 댄스그룹의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야외공연이 펼쳐지며, 기념식에 참여한 모두가 독립된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3·1절 행사 이후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

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태극기 순도장 짙기, 태극기 바래개비 만들기, 독립선언서 탁본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가슴깊이 새김과 동시에, 전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도가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독립,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념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